

제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 ②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⑤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있는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인증여를 받을 수 있다.
- ③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신고기간 동안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면한다.
-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③ 법인은 해산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 ④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 ② 토지의 정착물은 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다.
-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⑤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6.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8.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 ㄴ. 甲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甲이 법적 규제로 X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계약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급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쌍방 합의 하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⑤ 甲이 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11.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⑤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12.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ㄷ.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되어 무효로 된 후에도, 의사표시자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 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친다.
-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5.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ㄷ.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③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3자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 ④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책된다.
- ⑤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증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③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이 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 된다.
- ⑤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 ③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증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19.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의 성립을 위한 이행의 제공은 채무자의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 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ㄷ.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ㄹ.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②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2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나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③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여러 명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 ② 여러 명이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 ③ 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3.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③ 가압류된 채권은 그 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④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4.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는 특정물채무이다.
- ②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③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금전채무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이자이다.

25.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ㄱ. 변제받는 자는 변제자에 우선하여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ㄷ.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각 채무의 변제이익이 같으면 그 채무액이 큰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
- ㄹ. 변제충당은 이자, 비용,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6.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일부대위변제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을 채권자와 준공유하게 된다.
- ③ 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채권자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로받은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변제한 일부대위변제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두 채권이 이행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8.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②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고려청자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려청자가 멸실되어 甲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더라도 甲은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 ⑤ 고려청자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9. 丙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5억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 사이의 대여금채무관계가 소멸하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 ㄴ.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ㄷ.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에게 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甲이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수 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②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 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그 해제가 있는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1.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토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 ㄴ.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 매매대금 지급의무
-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매절차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위 근저당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으면, 채무자의 변제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④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

33.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X토지의 면적이 500 m²임을 전제로 대금을 1억원(1 m² 당 20만원)으로 하는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측 결과 470 m²에 불과한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X토지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X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인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④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처분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등기를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

36.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건물 완공 전에 甲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ㄴ.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지당권설정청구권도 丙에게 이전한다.
- ㄷ.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7.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위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개인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부동산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ㄴ. 조합재산이 甲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채권자는 甲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게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甲의 피용자 乙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인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甲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丁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甲은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ㄴ. 乙의 행위가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도 甲은 丁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乙 1억 원, 丙 6천만원인 경우, 乙이 자신의 채무 중 5천만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의 채무는 1천만원으로 감액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필요비상환청구권
③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임대차등기절차협력청구권

- ㄱ.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인 2025. 6. 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해 온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ㄴ. 甲은 2025. 2. 5.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백만원을 지급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 ㄷ. 乙이 2025. 7. 1.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 지급 후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① \neg ② \sqsubset ③ \neg, \sqsubset ④ \sqsubset, \sqsubset ⑤ $\neg, \sqsubset, \sqsubset$

제2과목: 사회보험법

41.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사회보장”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 ②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 ③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재정추계의 실시는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야 한다.
- ⑤ 재정추계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 ① 국공립 연구기관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44.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는 없다.
- 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보험료의 반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6.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직급여 ㄴ. 이주비 ㄷ. 광역 구직활동비
ㄹ. 직업능력개발 수당 ㅁ.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 ① \neg, \perp ② \neg, \Box ③ \neg, \exists, \Box
④ $\neg, \perp, \neg, \exists$ ⑤ $\perp, \neg, \exists, \Box$

47. 고용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ㄱ)개월 이상일 것
2. ~ 3. <생략>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ㄴ)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 6. <생략>

- ① ㄱ: 3, ㄴ: 3 ② ㄱ: 6, ㄴ: 3 ③ ㄱ: 6, ㄴ: 6
 ④ ㄱ: 9, ㄴ: 3 ⑤ ㄱ: 9, ㄴ: 6

48.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④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 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49.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과 부업 모두 포함)
- 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50.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한 경우
- ③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④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5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기금관리·운용전문위원회를 둔다.
- ㄴ.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 ㄹ.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neg ② \perp ③ \vdash, \equiv
④ \neg, \vdash, \equiv ⑤ $\neg, \perp, \vdash, \equiv$

52.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유족인 자녀가 20세가 된 때
- ② 유족과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③ 유족인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 ④ 유족인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⑤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단, 공개 제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② 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③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 ④ 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 ⑤ 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 내에 직속으로 설치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간호 및 간병
- ② 재활치료
- ③ 진찰 및 검사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 ⑤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생략>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가)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나)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① 가: 통상임금, 나: 50 ② 가: 통상임금, 나: 60 ③ 가: 통상임금, 나: 70
- ④ 가: 평균임금, 나: 60 ⑤ 가: 평균임금, 나: 70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 | | |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ㄱ)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ㄴ)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ㄷ)년 전 보험연도의 (ㄱ)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ㄴ)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

- ① ㄱ: 6, ㄴ: 5, ㄷ: 3 ② ㄱ: 7, ㄴ: 6, ㄷ: 3 ③ ㄱ: 7, ㄴ: 6, ㄷ: 5
 ④ ㄱ: 8, ㄴ: 7, ㄷ: 3 ⑤ ㄱ: 8, ㄴ: 7, ㄷ: 5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휴업급여 ② 유족급여 ③ 직업재활급여
 ④ 진폐보상연금 ⑤ 상병(傷病)보상연금

64.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후순위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65.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제97조(연체금) ① <생략>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ㄱ)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ㄴ)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ㄷ)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ㄱ: 15, ㄴ: 5천, ㄷ: 30 ② ㄱ: 15, ㄴ: 5천, ㄷ: 50 ③ ㄱ: 30, ㄴ: 5천, ㄷ: 30
 ④ ㄱ: 30, ㄴ: 6천, ㄷ: 30 ⑤ ㄱ: 30, ㄴ: 6천, ㄷ: 50

66.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② 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③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④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67.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이하 생략>

- ① ㄱ: 1천190, ㄴ: 30 ② ㄱ: 1천190, ㄴ: 50 ③ ㄱ: 1천190, ㄴ: 60
- ④ ㄱ: 1천290, ㄴ: 30 ⑤ ㄱ: 1천290, ㄴ: 50

68. 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개월을 더한 개월 수

- ① ㄱ: 6, ㄴ: 12, ㄷ: 12 ② ㄱ: 6, ㄴ: 12, ㄷ: 18 ③ ㄱ: 12, ㄴ: 12, ㄷ: 18
- ④ ㄱ: 12, ㄴ: 24, ㄷ: 12 ⑤ ㄱ: 12, ㄴ: 24, ㄷ: 18

69.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20세인 지역가입자 | ○ 19세인 피부양자 |
| ○ 19세인 직장가입자 |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70.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 |
| ○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72.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 | |
|---|
| <p>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p> <p>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 이상인 경우</p> |
|---|

- ① ㄱ: 1천 500, ㄴ: 10 ② ㄱ: 1천 500, ㄴ: 20 ③ ㄱ: 2천, ㄴ: 10
- ④ ㄱ: 2천, ㄴ: 20 ⑤ ㄱ: 3천, ㄴ: 30

7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② 이송(移送)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 ④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 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4.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급권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가 된 날
-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 ④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의 종류를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의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켜야 한다.
- ⑤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
-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 ⑤ 보험사무를 거짓으로 운영하여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납부 독촉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 ③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5회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다.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님)

- ㄱ. 사업주가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ㄴ.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ㄷ. 사업주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ㄹ. 사업주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반환하려는 때에 우선 충당하는 순위가 가장 선순위인 것은?

- ①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 ② 체납처분비
- ③ 월별보험료
- ④ 징수금의 연체금
- ⑤ 확정보험료

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
나. ~ 라. <생략>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

- ① ㄱ: 20, ㄴ: 15
- ② ㄱ: 20, ㄴ: 18
- ③ ㄱ: 25, ㄴ: 15
- ④ ㄱ: 25, ㄴ: 18
- ⑤ ㄱ: 25, ㄴ: 20

제3과목: 경제학원론

81. 수요와 공급곡선이 아래와 같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D , Q_S ,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 $Q_D = 24 - 3P$ ○ $Q_S = P$

- ① 균형거래량은 6이다.
- ② 균형가격은 6이다.
- ③ 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3이다.
- ④ 시장균형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다.
- 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동일하다.

82. 갑의 효용함수는 $U = \min\{X, 3Y + 2Z\}$ 이다. X, Y, Z 재의 가격이 각각 1, 9, 8이고, 소득이 8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X 재 소비량은?

- ① 1.6 ② 2 ③ 4 ④ 5 ⑤ 7

83. 재화 X 의 시장수요함수는 $Q_D = 120 - \frac{1}{2}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P - 3$ 이다. 정부가 단위당 6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_D , Q_S ,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 ①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 ②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 ③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동일하다.
-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84. X 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5 - \frac{1}{2}P$, 시장공급곡선은 $Q_S = P$ 이다. 정부가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단위당 세금은? (단, Q_D , Q_S ,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85. 갑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만 소비한다. 소고기의 가격만 상승하고 갑의 소득과 돼지고기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을 때, 갑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전보다 모두 적게 소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 ① 돼지고기는 정상재이다. ② 돼지고기는 열등재이다. ③ 소고기는 기펜재이다.
 ④ 소고기는 사치재이다. ⑤ 돼지고기는 필수재이다.

86. 구매력이 화폐소득으로 주어진 모형과 실물부존(real endowment)으로 주어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상품에 모든 예산을 소비한다.)

- ㄱ. 화폐소득모형에서 소득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선은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
 ㄴ. 화폐소득모형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정상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ㄷ. 실물부존모형에서 부존량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선은 한 제품의 절편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ㄹ. 실물부존모형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기존 예산선은 부존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7.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5L+2K$ 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 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는 생산량, L 은 노동, K 는 자본이다.)

- 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② 노동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③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④ 자본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⑤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88.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X_1, X_2\} + \min\{X_3, X_4\}$ 이고, 생산요소 X_1, X_2, X_3, X_4 의 가격이 각각 2, 1, 5, 3이다. 생산량(Q)이 1일 때 최소 비용은?

- ① 1 ② 3 ③ 5 ④ 8 ⑤ 11

89.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sqrt{L}K$ 이다. L, K 의 가격은 각각 6, 2이고, 단기에서 K 를 2단위 사용할 때, 기업 A의 단기 한계비용함수는? (단, Q, L, K 는 각각 생산량, 노동, 자본이다.)

- ① $3Q$ ② $6Q$ ③ $30 + 2Q^2$ ④ $4\sqrt{Q}$ ⑤ $6\sqrt{Q}$

90.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가 가격은 불변이다.)

- ①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이상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다.
 ② 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들의 수평합이다.
 ③ 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수평인 직선이다.
 ④ 시장의 장기균형가격은 수요측에서, 장기균형거래량은 공급측에서 결정된다.
 ⑤ 개별기업의 장기공급량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

91.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기술 A 또는 기술 B 중 하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장기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는 생산량, 새로운 기술의 추가는 없다.)

○ 기술 A의 총비용함수: $TC_A(Q) = 900 - 30Q + Q^2$

○ 기술 B의 총비용함수: $TC_B(Q) = 400 - 20Q + Q^2$

- ①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 모두 시장에 존속한다.
 ②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③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④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서로 다르다.
 ⑤ 존속하는 기업들의 장기균형가격은 서로 다르다.

92. 한계비용이 일정한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급 가격차별을 하고, 각 소비자 집단의 역수요함수는 $P = f(Y) - Q$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요량, Y 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고 $f(Y)$ 는 Y 의 증가함수이다.)

- ①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적은 양을 소비한다.
 ②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③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④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많이 소비한다.
 ⑤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93.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고객 집단을 두고 경쟁한다.
 ㄴ. 각 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니며,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ㄷ. 제품이 차별화될수록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4. 슈타켈버그(Stackelberg) 복점 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 - P$ 이고, 선도기업 A와 추종기업 B의 한계비용은 모두 8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A, B 두 기업의 생산량 차이는? (단, Q_D 는 수요량, P 는 가격이다.)

- ① 1 ② 3 ③ 5 ④ 7 ⑤ 11

95. 다음은 갑과 을의 게임이다. 갑은 남쪽, 을은 동쪽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라면 성립하는 조건은? (단, 일회성 동시게임이고, 괄호 안의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이며 A, B, C, D는 양의 상수이다.)

| | | 을 | |
|---|----|---------|---------|
| | | 서쪽 | 동쪽 |
| 갑 | 북쪽 | (A, 10) | (B, 10) |
| | 남쪽 | (10, C) | (10, D) |

- ① $B < 10, C < D$ ② $B < C, D < 10$
 ③ $B > 10, D < 10$ ④ $C < 10, B < 10$
 ⑤ $A < 10, B < D$

96. 오염물질 G 단위를 저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TAC = 40G - G^2$, 환경적 편익은 $TB = \frac{3}{2}G^2$ 이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저감량은?

- ① 0 ② 5 ③ 8 ④ 10 ⑤ 20

97. 갑과 을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과 을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은 동일하다.
- ② 효용이 높은 사람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강조한다.
- ③ 사회후생은 갑과 을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 ④ 사회후생은 갑과 을의 효용 중 큰 값으로 정의된다.
- ⑤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이다.

98. 다음 중 역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렌터카의 보험을 구매한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할 때가 있다.
- ②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차만 거래된다.
- ③ 부재지주가 소작인보다 토지 관리를 더 잘한다.
- ④ 공유지는 사유지에 비하여 토질의 저하가 심하다.
- 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99.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CPI는 파셰(Paasche)지수로 분류된다.
- ② CPI는 국내에서만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③ CPI는 가격 변화에 따른 연간 소비량 변화를 무시한다.
- ④ GDP 디플레이터는 해외에서만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⑤ CPI는 상품의 질적 향상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100.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고용이 성립한다.
- ②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 ③ 외생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 ④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한다.
- ⑤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한다.

101. 폐쇄경제 하의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기본모형에서 승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투자, 정부지출, 조세는 모두 외생변수이다.)

- ① 정부지출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 ② 투자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 ③ 균형 예산 승수는 1이다.
- ④ 구축효과로 정부지출 승수는 커진다.
- ⑤ 유동성 함정에서 정부지출 승수는 0이다.

102.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업률 변화와 실질 GDP 성장률의 관계를 말한다.
- ②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동일한 실업률 변화에도 실질 GDP 성장률은 상승한다.
- ③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2% 상승한다.
- ④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실업률은 경기침체에 증가하고 경기확장기에 감소한다.

103. 경제학자들의 거시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케인즈(J. M. Keynes)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 ② 프리드먼(M. Friedman)은 통화정책의 중대한 실수로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③ 펠프스(E. Phelps)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④ 맨큐(N. G. Mankiw)는 메뉴비용에 기초해 신축적 가격변동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
- ⑤ 루카스(R. Lucas)는 합리적 기대가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104.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는 실질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임금 및 이자율 변화가 기간 간 노동대체를 초래한다.
- ③ 생산성 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 ④ 가격의 경직성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 ⑤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임을 전제한다.

105.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로(R. Barro)에 의하면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했을 경우, 생명이 유한해도 성립한다.
- ② 민간의 입장에서 국채는 미래의 조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립한다.
- ③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조세 감면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미래의 조세 증가로 상쇄되어 성립한다.

106. 다음과 같이 주어진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IS: $Y = C(Y - T, Y^e) + I(r, x) + G$

○ LM: $r = \bar{r}$

(단, Y 는 현재 소득, Y^e 는 미래 소득 기댓값, T 는 세금, r 은 이자율, \bar{r} 는 정책 이자율, x 는 불확실성,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이다.)

※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미래 소득 기댓값의 양(+)의 함수이고, 투자는 이자율과 불확실성의 음(-)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이다.

- ① 정책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득은 증가한다.
- ② 미래 소득 기댓값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③ 세금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 ④ 정부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 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107.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2\sqrt{k}$ 이고, 감가상각률은 0.1이다.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단, y 는 1인당 생산량, k 는 1인당 자본이다.)

- ① 0 ② 0.5 ③ 1 ④ 1.5 ⑤ 2

10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케인즈 소비이론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
- ② 케인즈 소비이론에 따르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다.
- ③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 ④ 확률보행(random walk)가설에 따르면, 미래의 소비 흐름을 확률 이론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횡단면 자료에서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

10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불변이다.)

- ① 국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과 같아진다.
- ②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자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없다.
- ③ 고정환율제도에서 자국의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통화량 증가를 초래한다.
- ④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은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 ⑤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순수출 증가를 초래한다.

110. 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효용함수가 $U = C_1 C_2$ 으로 동일하며, 현재 소득이 Y_1 , 미래 소득이 Y_2 일 때, 갑의 (Y_1, Y_2) 는 (1, 2)이고 을의 (Y_1, Y_2) 는 (2, 1)이다. 정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피셔(I. Fisher)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_1 은 현재 소비, C_2 는 미래 소비이다.)

- ①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자가 된다.
- ②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을은 대부자가 된다.
- ③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binding)되지 않는다.
- ④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에서 0.5로 인상되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 ⑤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되면 갑은 현재 소비를 늘린다.

111.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란 순투자가 음(-)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② 미래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 토빈 q 는 감소한다.
- ③ 토빈 q 가 1보다 작으면, 순투자는 증가한다.
- ④ 감가상각 충당금의 증가는 이윤의 감소를 초래한다.
- ⑤ 신고전학과 투자이론에 따르면, 기술 진보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할 경우 투자는 감소한다.

112. 균형환율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로 표시한다.)

- ①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은 양국 통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 ②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 ③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주어진 기대환율에서 자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 ④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양국 투자수익률의 차이는 환율의 기대변화율과 같다.
- ⑤ 실질이자율평가설(Real Interest Rate Parity Hypothesis)과 구매력평가설이 항상 성립하면 양국의 실질이자율 차이는 0보다 크다.

113. 소득-여가 모형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C, R) = CR^2$ 이고, 노동이나 여가를 위해 총 30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비노동 소득은 없다. 소비재 가격이 1, 시간당 임금이 8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노동시간은? (단, C 는 소비재, R 은 여가 시간이다.)

- ① 8 ② 10 ③ 13 ④ 15 ⑤ 20

114.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sqrt{L} + \sqrt{K}$ 이고 생산물가격은 36, 임금은 2, 자본가격은 2이다. 임금이 1로 하락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의 변화분은? (단, Q 는 산출량, L 은 노동, K 는 자본이다.)

- ① 0 ② 63 ③ 81 ④ 144 ⑤ 243

115.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sqrt{L}, 10\}$ 이고, 생산물(Q)의 가격은 1, 임금률은 w 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은? (단, L 은 노동이다.)

- ① $L = 10 + \frac{1}{w^2}$ ② $L = 100 + \frac{1}{2w^2}$ ③ $L = \min\left\{\frac{1}{\sqrt{w}}, 10\right\}$
 ④ $L = \min\left\{\frac{1}{w^2}, 100\right\}$ ⑤ $L = \min\left\{\frac{1}{4w^2}, 100\right\}$

116. 복숭아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고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는 $Q_s = 200L - L^2$ 이다. 복숭아 개당 가격은 3, 기업 수는 30, 총노동공급량은 500일 때 균형임금은? (단, Q_s 는 복숭아 생산량, L 은 노동이다.)

- ① 1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900

117. 실업자의 취업률이 40%, 취업자의 실직률이 10%일 때, 실업자가 취업하는 수와 취업자가 실직하는 수가 일치하는 준제상태(steady-state)의 실업률(%)은?

-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118.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②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한계비효용보다 높다.
 ③ 고전학파는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이 일치할 때 노동수요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④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때,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⑤ 실질임금 상승으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119. 실질임금의 경직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실질임금이 경직적이어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업은 사라진다.
- ②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외부자는 내부자보다 낮은 실질임금에도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 ③ 효율적 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높은 실질임금을 유지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 ④ 암묵적 계약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와 기업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실질임금을 선호할 수 있다.
- ⑤ 암묵적 계약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실질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한다.

1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완전경쟁 노동시장과 비교했을 때,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률이 ()하고, 고용량이 ()한다.

- ① ㄱ: 상승, ㄴ: 감소 ② ㄱ: 하락, ㄴ: 증가 ③ ㄱ: 상승, ㄴ: 불변
- ④ ㄱ: 하락, ㄴ: 감소 ⑤ ㄱ: 불변, ㄴ: 증가